

법무사 제1차 시험대비

# 시대에듀 법무사 실전 모의고사

<제 1교시>

문제책형	시험과목	제1과목 (헌법, 상법) : 50문 제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50문
①		

## 응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시대에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dedu.c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이의제기** : [시대에듀 홈페이지 / 동영상 강의 내용 및 학습 질문]  
- PC(컴퓨터) : 시대에듀 강의 재생 플레이어 창 > 우측 [학습질문]  
- 모바일 : 시대에듀 앱 > 내강의실 > 강좌명 터치 > 커리큘럼 선택 후 상단의 [학습질문]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고 있으며, 답변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최종정답 공개** : [시대에듀 홈페이지 / 강의자료실]에 게시

【민 법 40문】

【문1】 관습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 ②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 ③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 ④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가족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문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 ②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채무가 특정되었으므로 이사회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신의칙은 민사상 실체법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법, 소송법, 공법상의 실체법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 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문3】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누구라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반면에 단독행위와 달리 미성년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추인 여부의 확인을 최고하였으나 상당한 기간 내에 확인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③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④ 제한능력자는 아직 능력이 되기 전에는 추인 여부의 확인을 못하므로 계약의 의사표시의 철회나 단독행위의 거절의 의사표시도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할 수 없다.
- 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자전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문4】 다음 중 권리능력 없는 법인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이사인 대표이사 마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A의 대표자로서 행한 경우 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서 행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
- ② 갑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을에게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을이 그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던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데 대하여 불법행위 피해자가 갑 주택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을은 갑 주택조합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갑 주택조합에 대한 법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나 상속될 수 없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소유형태는 합유이다.
- ④ 비법인사단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한다.
-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들이 2개의 사단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사단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5】 중물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중물에 해당한다.
- ② 중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야 하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중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 ③ 중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 ④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중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 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 ⑤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도 중물이 될 수 있다.

【문6】 다음은 흠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것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없다.
- ② 채무자 甲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甲의 채권자 乙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 乙과 짜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丙을 상대로 허위표시를 이유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송을 제기한 경우, 선의의 증명책임은 丙에게 있다.
- ④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은 진품임을 전제로 하여 乙 소유의 그림 1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甲은 중도금지급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甲은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乙에게 물을 수 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甲은 乙을 속여 그 소유의 시가 2억원 상당의 X토지를 1억 5천만원에 매수한 후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은 丁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다가 丙에게 시가보다 높은 2억 4천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乙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甲을 상대로 하여 임대수익 및 전매차익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甲으로부터 甲의 부동산을 담보로 3천만원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甲을 대리하여 丙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은 乙이 선임한 복대리인 丁이 丙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丁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甲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진다.
- ②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을 위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리권수여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으므로, 乙이 甲의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甲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않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 ③ 乙은 甲의 X건물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에게는 대리권이 없었다. 丙은 乙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丙에게 甲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丙은 乙에게 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그 후 丙은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⑤ 甲의 무권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진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문8】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 ② 계약당사자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 ③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문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③ 甲은 2017.10.1. 친구 乙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2018.10.1.로 정하였는데, 2019.2.16. 현재까지 乙은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甲이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④ 원금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면 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도 미친다.

【문10】 부동산물권의 변동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 乙, 丙은 이행의 편의상 X토지에 관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甲으로부터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 이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乙이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②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고,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다. 甲에서 직접 丙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관해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甲과 乙 사이의 매매가 적법하게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합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면 지분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물권적으로 귀속하게 된다.
- ④ 위치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멸실된 건물과 같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써 멸실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건물의 내용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다.
- ⑤ 甲 소유 부동산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甲에서 丙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

【문11】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미성년자인 전(前) 등기명의인이 친권자에게 이해상반행위인 부동산 증여를 했어도 일단 친권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③ 甲 소유의 X 건물을 乙이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丙이 乙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 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하기 위해서는 甲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다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사실에 관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문1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X 토지가 乙과 丙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 甲은 乙뿐만 아니라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과 무관한 丙에 대하여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X 토지의 시효취득자 甲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이 등기명의인 乙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면 乙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 ③ 甲이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乙에게 X 토지의 매수 제의를 하였다면, 甲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완성된 경우에는 등기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등기 없이 그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 ⑤ 甲은 乙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X 토지를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甲이 乙에게 X 토지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고 20년 간 X 토지를 점유하였던 것이라면, 甲은 乙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문13】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건물을 제외한 채 그 대지와 부근의 토지들을 함께 乙에게 매도하여 건물과 대지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라도 甲이 위 대지 부분을 다시 매수하고 그 대신 乙에게 위 토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를 넘겨주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으나, 위 특약이 甲측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된 경우, 甲은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 ②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은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건축하였더라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 ③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매수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후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④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현존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하여 연체된 지료의 합이 2년분에 이르면 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문14】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설정 이후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 ②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금반환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는 피담보채권과 함께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 ⑤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문15】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유치권의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 ③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 ④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을 그 판결확정 이후 매수한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 ⑤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문16】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 후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③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을 위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甲과 丙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라도 이는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 ④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⑤ 권리질권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문17】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써는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없다.
-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 ③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소멸하였으나 그 잔존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신이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다.
- ④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는 당초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대상으로 한다.
- 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이에 의하여 소멸한다.

【문18】 금전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취소와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 ② 금전채무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경우, 당해 금전채무가 불확정기한부 채무라면 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③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지연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 ④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액채권인 외화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대용금부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없다.

【문19】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거나, 매도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계약 당시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면 증여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 ⑤ 채권이 가압류되거나 지급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없어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20】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물에 추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 공사 중 제3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 ② 채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진다.
- ③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변제할 수 있다.
- ④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 ⑤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문21】 다음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채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는 변제 기타 자기의 출채로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②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 ③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필요하다.
- ④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 이러한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주채무의 발생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그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되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로 보증채무가 확정되므로, 보증인은 그 당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고, 그 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22】 다음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이행인수약정이 체결된 경우,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위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직접 채무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없다.
- ③ 甲은 乙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乙은 甲에게 5천만원, 丙에게 1억원 등 총 3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乙의 재산은 시가 2억원 상당의 X아파트가 유일한데, 乙은 이 아파트를 丙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에게 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④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 ⑤ 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甲의 대여금채권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전에 성립되었다면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피보전채권이 된다.

【문23】 채권양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부종성이 없으므로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여도,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에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가 포함하며,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할 때에 명시적으로 항변사유를 포기한다거나 양도되는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뜻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 ③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양도 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사전에 채권양도인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승낙이 모두 있는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날 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 ④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같이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⑤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채권양수인의 약의 내지 중과실은 양수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문24】 채무인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전(前)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前)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잔금으로서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로서의 지위에서는 벗어난다.
- ③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도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④ 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약정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면,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다.
-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다.

【문25】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대위변제자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 ④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⑤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제3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여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문26】 다음 상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면책적 채무인수는 이로 인하여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므로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면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②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존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 당시 여전히 사전구상권에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면책행위 등으로 인해 위 항변권을 소멸시켜 사전구상권을 통한 상계가 가능하게 된 때가 피압류채권의 압류시 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 ⑤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문2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다면 판례에 따름)

- ①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다.
- ②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당사자들은 특약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성립시킬 수 있다.
- ③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과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⑤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인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28】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일부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된다.
- ②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고 그 소장이 송달된 후, 그 소를 취하하고 본래의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④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련이 없는 부수적 채무의 위반만을 이유로 한 해제권의 행사도 허용된다.

【문29】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선고된 때이다.
- ② 타인의 물건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것이 매수인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③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에 있어서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매도인에 대한 목적물의 하자담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⑤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문30】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위하여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임대인과 사이에 건물인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통상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차목적물을 개촉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다.
- ④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갖는 차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면 임차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의 차임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 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문31】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 수급인의 공사지연에 따른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도급인의 의사표시에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 ③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 도급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도급인의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수급인은 해제시점까지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⑤ 도급인에게 도급이나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문32】 조합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하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면 그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와 같은 조합원의 지위의 변동은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
- ②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탈퇴사유에 대해 조합계약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 ③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 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
- ④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 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이 경우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는 탈퇴 당시이다.

【문33】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② 채무자가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데 사용한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
- ③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 ④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 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법정이자자의 지급은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종된 의무이므로 역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한다.
- 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문34】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어 있다면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 ②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인다면 피용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 ③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된다.
- ④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는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 ⑤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문35】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 일방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약혼예물이 수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부부 일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해소되어도 약혼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 ③ 甲男과 乙女는 혼인하여 현재 미성년자인 아들 丙을 두고 있는데,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적이므로 협의나 심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 자체가 분명하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문36】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잃게 되므로, 이들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는 제3자에 포함된다.
- ② 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제1심 가정법원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을 종기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한 경우, 항고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할 수는 없다.
- ③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한정후견 등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959조의2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도 가능하다.
- ⑤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하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는 양부자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자관계는 소멸한다.

【문37】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 ②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민법 제9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법정후견 청구권자, 임의후견인이나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법정후견 심판을 한 경우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과 동시에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한다.
- ③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 ④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⑤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38】 대습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 ②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한 경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③ 대습상속에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와 같이 사망한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 ④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대습상속을 한다.
- ⑤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문39】 甲은 사실혼 배우자 乙과 사이에 甲이 인지한 성년인 자녀 丙을 두었고, 丙에게는 혼인 중 출생자인 자녀 丁이 있다. 甲은 오랜 질병으로 투병하다가 2022. 10. 1.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에게는 A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X 부동산, B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甲의 투병생활 중 부부 사이에서 요구되는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를 정도로 甲을 간호하였더라도 乙은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 ② 丙이 2022. 10. 20.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 丙이 A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 ③ 丙이 2022. 10. 20.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 그때부터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까지는 X 부동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의무를 진다.
- ④ B가 2022. 10. 12. 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으로 같은 달 13.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丙이 2022. 10. 24.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경우, B는 그 후 적법하게 진행된 X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⑤ 만약 甲에게 오래전부터 별거 상태인 법률상 배우자 戊가 있었고 甲 사망 후 丙이 가정법원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면, 戊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문40】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피상속인이 특정한 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에 그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때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들의 의사보다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③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 ④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
- 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